

“민주주의 강화 위해 5·18정신 헌법 전문에 명시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1년... 광주일보-한신협 공동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 정 의장은 다당제 국회를 운영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다. 나아가 정 권교체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일보 등 한국 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는 지난 31일 정 의장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향후 국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 취임 1년이다. 소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년간 열심히 노력했다.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일관히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라는 꽤 오랜 기간의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신했다고 자평한다.

- 그동안 성과는.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실현했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특권내려놓기위원회를 운영해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면제 폐지, 친인척 고용제한, 의원수당 관련 세제개편 등 여러가지 특권들을 내려놨다. 또한, 정부-여당과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했고, 예산안 처리 헌법기한 준수, 개헌특위 설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탄핵소추안 통과다.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10여 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평가한다면.

▲10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전 정부를 심판하고, 또 국민에 의해 평화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악할 행동들에 대해, 성숙한 방법으로 주권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성과 새 정부 소통·협치로 사드·적폐청산 등 풀어야 개헌에 제왕적 대통령제·지방분권 개선 넣어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실효성 인정되면 추진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언을 해 준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시기에 권력을 이양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됐다. 경제문제, 사드배치 등 외교문제, 남북문제, 적폐청산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청와대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 그리고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소통과 협치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취임 후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여야정 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뒤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 또 국회와 청와대 간의 협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성공한 정부로 남

을 것이라 확신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다. 야당 때에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와 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와 여당은 국회를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데서 실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과 소통해야 야당으로서 인정받고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 여소야대 국면이 된 만큼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맞는 국회 운영 방안은.
▲여소야대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도는 복잡하지만 일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이 매 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각 당에서 호응을 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 국회운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협업, 여야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에 대한 전망은.
▲정치권과 국민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여야합의를 통해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지금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국민과 정치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1987년에 만들어진 낡은 옷을

2017년 현재 입기엔 웅색한 부분이 많다. 모두가 원하고 있고 실행을 위한 기구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권력구조에 대한 의장의 생각은.
▲전문가 집단과 국민 의견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분권형대통령제와 4년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여러 조사에 나와 있다. 저는 어떤 방식이든 현재의 대통령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제라는 것도 지금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하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다. 또한,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선거제도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시너지가 생긴다고 본다.
-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적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계에서도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
-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입장은.
▲모두를 옮기는 것이 좋은데, 그건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국회 분원 설치에 세종시가 공동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용역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인정되면 추진하되 만약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면 제고하는 것이 순리다.
- 분원을 설치하면 분회의도 하는 것인가.
▲분회의는 어려울 것 같고 상임위원 가능하지 않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누문동 뉴스테이’ 층수 놓고 광주시-주민 갈등

시 경관심의위 ‘합법적 조건부 심의 의결’ 주민 ‘추가사항 요구는 월권... 처리 부당’

비수도권 최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의 최고층 층수를 놓고 광주시와 주민들 간 갈등을 겪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경관심의의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이후 4차례 회의 끝에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소위원회는 ▲광천1교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때 8부 능선이 보일 것 ▲KDB생명(옛 금호생명) 빌딩이 가로 할 것 ▲도시계획위 결정사항 이하로 할 것을 3대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물레이션 결과 광천1교에서 무등산 8부 능선이 보이기 위해서는 최고층 높이가 137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위가 결정한 마지노선도 137m다. 그러나 KDB 빌딩이 134m여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134m 이하로 건축하는 게 불가피하다.

137m에서 134m로 낮아질 경우 층수를 한 층씩 낮출 수 밖에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누문동 뉴스테이는 당초 44층 아파트 13개동(棟)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 경관심의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11월29일 중앙부 44층, 금남로쪽 27층, 광주천변 41층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도시계획위가 의결 조건으로 제시한 ‘중심부는 높게, 남측과 북측은 낮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용적률은 낮추라’는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경관심의의 소위에서는 다시 진동 끝에 금남로쪽 27층, 광주천변 39층으로 낮추고 중앙부 최고층 높이는 사실상 134m로 제한했다. “39층 높이인 인근 임동 재개발과 맞물려 무등산 조망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관철된 결과다.

“무등산~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로 이어지는 바람길이 막혀 도시열섬 현상이 악화될 수 있고,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반발도 적잖은 부담요인이 됐다.

입주 가구수도 사업 초기 3524가구에서 심의 결과 3413가구로 줄었고, 다시 소위 논의 결과 3266가구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처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관심의 소위가 본회의 조건부의 결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고, 경관심의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2개월 만에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돼 지난 1월부터 이주가 진행중인 인천 정전2구역과 지난해 11월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 만인 지난해 23일부터 이주가 개시된 심정2구역에 예로 들며 “누문구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 행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실이 없고 합법적 범주 안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 승인 결정이 모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농업 6차산업 경영체 시설부족·판로 미흡 어려움”

광주전남연구원 장덕기 위원 주장 “분야별 수익창출모델 발굴 등 시급”

전남도내 농촌에서 운영중인 6차 산업화 경영체들이 시설 부족과 판로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차 산업화 1차 산업(생산), 2차 산업(가공), 3차 산업(유통, 관광) 등을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장덕기 책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인포’의 ‘전남농업 6차산업화 경영체 실태 및 시사점’에서 전남농업 6차산업화 경영체 1572개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농업 6차산업의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농업 6차산업화 관련경영체 1572개소 설문조사 결과, 1×2차 유형이 74.5%(1171개소)로 향후 체험·관광 등 3차 산업을 융복합한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제조·가공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의 형태를 보면 단순형(110업체)보다 복합형(1462업체)이 압도적으로 많아 앞으로 사업전개에도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경영체 중 인증경영체의 비율이 일반 경영체보다 2배수 가량 높게 나타나 인증경영체들의 사업 추진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로사항으로는 시설확충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판로개척(27.4%)과 운영자금(15.6%)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은 1000만~5000만원이 25.8%였으며, 1억원 미만인 57.8%를 차지했다. 정책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2.2%를 차지해 다소 미지근한 반응이 나왔다. 5점 척도 조사에서 귀농 경영체의 평균값(3.13)이 기존경영체(3.03)보다 높아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장 책임연구위원은 미래 전남농업 6차산업화의 기본방향으로, 지역별 대표 수익창출모델 발굴·육성 및 확산, 신규 경영체의 창업·보육 지원 등 다양한 추진을 향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장덕기 책임연구위원은 “농업 6차산업화의 육성 및 활성화는 미래 농가의 경제적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농가유형과 분야별로 수익창출모델을 발굴하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도·행정적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17. 6. 10 SAT - 6. 11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6월 10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7:00	프린지페스티벌 / ACC관람
	part2. 달빛나눔	19:00~22:00	멘트특강 / 공감콘서트
6월 11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멘트특강
구글러 김태원 (구글 상무)

달빛나눔콘서트
가수 여우별밴드

대 상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에 관심 많은 열정적인 광주 청년(20~30대)
▶ 참가시간 : 2017. 6. 10(토) 18:00~22:00
▶ 모집인원 : 신청순 80명
▶ 참가비용 : 없음(식사/기념품 제공)
▶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주관 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